

납품된 자재 업자에 준 뒤 재납품 낙찰자 정해놓고 입찰, 뒷돈 쟁겨

영광원전 직원 비리백태… 檢, 14명 적발, 8명 구속

영광원전 내부에 수년간 뿌리깊게 자리했던 각종 비리가 겹찰 수사로 드러났다. 품질보증서 위조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한 겹찰은 이미 납품된 자재를 업자에게 내준 뒤 재납품하도록 하거나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해 뒷돈을 쟁기는 등 고질적이고 비도덕적인 각종 비리도 밝혀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자체 감사와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보증서 위조업체 대표 등 관련자 5명과 비리 연루 직원 및 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1명(8명 구속)을 기소하고, 1명은 기소중지, 7명은 기관통보 조치했다.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사무서 위조 및 행사, 사기, 입찰방해, 배임증재,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또 영광원전 전현직 직원들에게 배임수재,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사기, 입찰방해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구속된 S사 대표 이모(41)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직원 3명에게 7200여 만원을 뇌물로 주고, 한 번 납품된 자재를 다시 납품하는 방식으로 6400여 만원을 횡령했다. 역시 구속 기소된 영광원전 조모(52) 과장은 4800만원을 뇌물로 받고, 이씨와 이종남장을 공모했다.

이밖에도 원전 직원들은 직장 내 동호회 후원 명목으로 200만원을 받거나 업체 관계자 명의로 코스닥 상장

기업 주식을 거래하면서 590만원의 시세 차익을 쟁인 것으로 밝혀졌다.

겹침수사 결과 영광원전에 위조된 보증서로 납품된 부품은 377개 품목 1만396개였다. 178개 품목 6012개는 실제 사용돼 현재는 대부문에 대처되는 배임수재,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사기, 입찰방해 등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대행업체가 해외 인증업체에서 발급한 것처럼 위조한 QD증, A등급 보증서를 납품업체가 전달받아 부품과 함께 원전에 제공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일부 업체는 보증서를 직접 위조해 납품까지 했다.

그러나 겹찰은 원전 직원이 보증서 위조를 목인·방조한 정황은 찾지 못했다고 전했다.

입찰을 통해 납품된 자재를 업자에 내준 뒤 다시 사들인 사례도 있었다.

지난해 고리원전 사건 이후 현장 자체보관금지, 종고 자재 폐기시 사진 활용 등 지침이 보완됐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부품은 등록조차 안된 재보관됐다. 입찰 과정에서는 업체 간 담합이 난무했다.

담당 부서로부터 납품 가격과 납품 예정일을 기재한 '가격전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업체는 다른 업체에 더 높은 금액을 써내도록 부탁해 계약을 따냈다.

'최초 견적의뢰업체=낙찰업체'라는 등식이 나올 정도였다. 업체들은 서로 둘러리 역할을 하며 계약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영광원전 납품은 '빅 3'로 불리는 업체들이 사실상 독과점 체제로 운영됐다는 것이 겹찰의 설명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파·렴·치·범

여중생 성추행 후 가짜 합의서 제출 50대 구속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가짜 합의서를 만들어 제출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광주북부경찰은 24일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합의서를 위조한 혐의로 일모(50)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11년 2월 당시 13살이던 가출청소년 A양에게 접근, "제재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에 데려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당 사실에 대한 수사가 시

작되어 A양을 찾아가 백지에 서명을 받은 뒤 고소취하서를 허위로 작성해 경찰서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임씨는 과거 학원을 운영할 때 청소년 인터넷 텔넷사이트로는 대처해 가을 청소년들과 만나 수십 차례 밥을 사주고 재워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씨가 현재 성추행과 합의서 위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여수산단 잇단 사고
부두 하역 40대 숨져



24일 오전 11시께 여수 국가산단 내 낙포 부두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최(48)모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하역작업을 감독하던 최씨는 여수 산단 모 케미칼사가 수입해 낙포항 5번 부두에서 하역한 소금(염화나트륨)을 옮기는 작업 중 크레인 앞에 있던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빠져 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또 이날 낮 12시25분께 여수시 월하동 여수국가산단 내 화물터미널 인근 정비소에서 수리 중이던 빈 탱크로리가 폭발해 탱크로리 운전자 김모(48)씨와 정비사 주모(47)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김씨는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수 소방서는 탱크로리 정비 작업 중 용접 불꽃이 탱크에 낸 유증기에 튀면서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인터넷 시체 구해 하위 보험금
○인터넷을 통
상나팔 해 구입한 남의 시체를 본인의 것으로 속여 보험금을 타낸 40대 여성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지난 2011년 12월 친언니 등 지인과 짜고 자신의 체계와 비슷한 시체를 병원으로 옮겨 살인죄로 기소된 김모(53)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3000만원을 공탁한 점, 나이나 전과, 항소심에서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광주시 북구가 설 명절 성수식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에 나선 24일, 북구청 위생과 직원들이 말бу우시장 한 방앗간에서 침기름과 고춧가루 유통기한과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수억대 사기행각 교수 징역 2년

전남지역 한 사립대 교수 장애인 여성은 상대로 수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흥지호 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53) 교수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5년 남편과 별거중인 장애인 여성 이모(53)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시작한 뒤 5년 동안 90차례에 걸쳐 1억4600여만원을 빌리고 13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자는 피해자인 여성과 내연관계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채무를 갚을 것을 계속 요구했고, 액수도 커며, 피의자의 행위로 피해자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5년 남편과 별거중인 장애인 여성 이모(53)씨에게 접근해 내연관계를 시작한 뒤 5년 동안 90차례에 걸쳐 1억4600여만원을 빌리고 130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

수뢰·음주운전 '허튼짓' 경찰 일벌백계

광주경찰, 파면·강등

비위로 징계를 받는 경찰이 뒤따르고 있다. 24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서부경찰은 이 날 징계위원회 회를 열고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통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B 경위에 대해 1계급 강등 조치를 취했다.

B 경위는 지난 17일 밤 혈중 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또 지난 4일 술을 마시고 나주의 한

故 장준하 선생 39년만에 누명 벗어

법원, 재심서 무죄 선고

박정희 독재정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른 고(故) 장준하 선생이 재심을 통해 39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법원은 재심을 청구한 고인의 장남 호균(64)씨에게 과거 잘못된 판결에 대한 사죄를 구했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장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번 재심 판결이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에 걸쳐 장선생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재판부는 "국민주권과 헌법정신이 유린당한 인권의 암흑기에 시대의 등불이 되고자 스스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고인의 숭고한 정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이번 재심 판결이 유명을 달리한 고인에게 조금이라도 평안한 안식과 위로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심 대상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2010

년 12월 대법원에서 위헌·무효임이 확인됐다"며 "형사소송법 325조에 의해 장 선생에게도 무죄를 선고해야 마땅